

청년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인구 는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개발 급물살

전남지사 당선인 이것부터 해결

<6> 저출산·인구절벽

전남의 당면 현안은 인구 감소 문제다.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인구 위기다.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선이 붕괴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인구는 189만 6000명으로, 1970년 330만명 대비 42.8%(141만3000명) 줄었다.

전남도가 예측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전남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이상 더 줄어든다. 문제는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24만명이던 유소년

2013년 전국 최초 데드크로스다. 22 시·군 중 16곳 소멸 위험 주거환경·자녀양육 시설 개선 가임여성 유입 정책 펼쳐야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실 맞는 대책 시급

인구는 2035년 25.3%(6만1000명) 줄어든 17만9000명으로 예측,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18만7000명) 또한 20.2%(24만명)가 줄어든 94만7000명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 경제여건 악화가 불보듯하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연구'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이 중 고령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

다. 각종 통계에서 전남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초고령화·저출산 심화지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광역단체가 자칫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 등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거환경·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 문화와 여가시설 개선 등 만 20~39세 가임 여성 인구 유입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김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역발전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전남도정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삼았다. 일자리 창

출을 통해 전남도 당면 현안인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유치와 지역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두마리 토끼 포획 전략'이다.

김 당선인은 "전남 인구 감소는 인구 유출 문제이며, 특히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전남 청년인구 유출은 연 평균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도 그동안 출산율·출생아수 증가를 목표로 한 정책 추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애주기별·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청년, 일자리, 귀농·귀어·귀촌, 다자녀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등을 담은 '2030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다음달 10일께 내놓을 계획이다.

김 당선인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교육·의료 등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 총괄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주내 디자인 공모 착수 성인학원 150억 공공기여

광주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승인한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성인학원 축이 조만간 설계디자인 공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인학원이 대학캠퍼스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내놓을 규모는 15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5일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개발방안과 공공기여 등을 협의하는 조정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3차례 갖고 개발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부문 3명, 호남대 추천 인사 3명, 도시계획·교통 관련 전문가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기존 대학부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18층 내외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220%보다 낮은 200%로 했다.

이번 주에 설계디자인 공모에 나서 당선안이 선정되면, 호남대가 사업계획서와 공공기여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실시, 최종적인 공공기여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호남대 축이 150억원 정

도를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결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가격의 18%를 공공기여 규모로 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이 제출한 '호남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자문(안)'을 심의, 지역 최초로 '공공기여제'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공기여제는 공원과 도로 등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협상을 통해 기여받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현재 학교부지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내놓도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1일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영향이 있는 대규모 유류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민관 사전협상을 거쳐 공공성을 높여 개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도출한 바 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은 당초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 호남대 쌍촌캠퍼스 6만4116㎡에 아파트 18~27층 13개동 995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219.11%,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14.43%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마대비 수로관 쓰레기 수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25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 직원들이 유동동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빗물 역류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로관에 쌓인 토사물과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5·18진상규명신고센터 운영

내일 시청서 환판식

광주시는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총괄하는 5·18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환판식을 27일 오전 11시 시청 1층 5·18진실규명지원단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환판식에는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사)5·18구속부상자회장 등 오월단체와 (재)5·18기념재단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진상규명 관련 제보를 받아

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재)5·18기념재단 및 '5·18제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성폭력 공동조사단')과 함께 5·18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광주, (재)5·18기념재단,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접수된 모든 제보를 관리하게 된다.

제보는 5·18 행불자, 헬기사격, 집단발포, 과격진압, 암매장 등 5·18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와 (재)5·18기념재단으로 하면 되며, 여성가혹행위 피해자 등 여성 관련 피해신고는 성폭력 공동조사단에서 접수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용 위기' 목포·영암·해남 1472억 긴급처방

전남도 TF 구성

고용·산업 위기에 내몰린 목포·영암·해남지역에 긴급처방으로 1472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 가동에 들어

갔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후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전남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 32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을

단장으로 고용위기대응부·산업위기 대응부 등 2개 부와 홍보총괄·고용위기사업지원·산업위기사업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운영된다. TF는 실질적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유동성 지원 등 42개 사업에 147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경영안

정자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유관 기관들은 오는 26일 목포와 영암, 27일 해남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연다.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책자,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